

허문영

본회 연구위원, 민족통일 연구원 연구위원.

평화 통일: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

머리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노래이기도 하지만, 출퇴근시 동네 지하 철역 벽에서도 자주 보는 구호이기도 하다. 그런데 의문이 있다. 정말 통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꿈속에서도 바라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추구해야 할 만큼 소중한 지고의 가치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통일을 성취해야 하는가? 만일 통일 그 자체가 우리의 궁극적 소원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전쟁을 무릅쓰고서라도 통일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1950년대 한국전쟁을 통하여 그 한계를 경험했다. 전쟁에 의한 통일이 엄청난 인명손실과 물질 손해를 초래한다는 것을¹⁾, 그

1) 국군 22.9만명, 북한군 52만명, 유엔군 3.8만명, 중공군 90만명 등 총 180만명 군인 사망, 남한지역 민간인 사망 24.5만명, 부상23만명, 공산군에 의한 피살 13만명, 남북8.5만명에 달하였다. 그 결과 30만명의 미망인, 33만명의 불구자, 10만명의 고아, 100만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 물질 손실을 비롯한 보다 상세한 피해내용은 다음을 참조. 김학준, 「한국전쟁」 (서울: 박영사, 1989) pp. 344~349.

리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여건상 주변 4국의 개입으로 인해 무력 통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임을. 더우기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명분과 논리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보다 통일을 우선시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무력 통일을 정당화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소원인 통일이 평화 통일이 되어야 함은 더 이상 다른 논의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그런데 '평화 통일'이라는 말속에는 적어도 3가지 이상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 첫째는 통일성취 방법으로서 '무력적인 전쟁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수행되는 통일'을 의미하는 사전적 뜻이다.²⁾ 이같은 의미규정은 북한 사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³⁾ 평화가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통일성취 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평화를 이루면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뜻이다. 평화와 통일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통일성취 목적과 관련된 것으로 통일국가가 평화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⁴⁾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뜻이다. 요컨대 평화 통일이란 통일을 성취하는 방법과 과정과 목표가 평화적이어야 함을 뜻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같은 전제하에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정책방향을

1) 민병천, 「민족통일론」(서울: 고려원, 1985), pp. 11~34 ; 이상우, 「평화통일의 이론」 「한국의 안보환경 제2집 증보판」(서울:서강대 출판부, 1986), pp. 581~585 ; 박종화, 「평화통일 신화의 쟁점과 전망」 「목회와 신학」, 1993년 1월호, pp. 66~75 ; 김영한, 「개혁주의 평화통일신학」 「목회와 신학」, 1993년 1월호, pp. 76~92

2) 「민중 옛센스 국어사전」, (서울: 민중서림, 1991) p. 2616.

3) 무력행사에 의거함이 없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 「조선 말대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802.

4) 한반도 분단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일본·미국·러시아(구소련)·중국 등 주변 4국이 통일 한국의 안보정책 기초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을 필자는 각종 국제세미나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 남북한의 군사력 증강 문제에 대하여, 미국의 경우 북한의 핵무기개발의혹과 남한의 북방외교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경우 통일한국의 국방정책에 대하여, 중국의 경우 주한미군의 주둔문제와 관련하여 깊은 관심과 우려를 나타냈다.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다음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중심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세속적 평화관과 어떤 부분이 같고 다르며, 한국교회는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해 왔으며, 그 공과가 무엇인가?

둘째, 북한에서 생각하는 평화관은 무엇이며, 평화통일 방법으로 무엇을 주장, 실천해 왔으며, 그 한계는 무엇인가?

셋째, 남한은 평화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떠한 평화통일안을 주장, 실천해 왔으며, 그 한계는 무엇인가?

넷째,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볼 때, 남한 정부와 교회가 추구하고야 할 평화통일 정책방향은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겠는가?

1. 기독교 평화관과 한국교회의 평화통일 운동

가. 기독교 평화관¹⁾

일반적으로 평화는 전쟁이나 갈등이 없이 세상이 평온한 상태²⁾ 또는 '평온하고 화목함'³⁾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평화가 의미하는 내용은 문화와 시대와 공간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왔다. 서양문화권에서는 대체로 평화를 전쟁 없는 상태로서의 질서유지 즉 외향적, 정치

1) 『성서백과대사전』(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1), pp. 847-849 ; 『성서대백과사전』(서울: 기독교회서사), pp. 169-172; 『신학사전』(서울: 엠마오, 1986), pp. 837~838. ; 최상용, 『현대 평화사상의 이해』(서울: 한길사, 1992) ; 박종화, 『기독교 평화운동의 이론과 실천유형』, 『평화 이론과 실천의 모색』(서울: 삼민사, 1992), pp. 11~25; 그리스도교 철학연구소편, 『현대사회와 평화』, (서울: 서광사, 1991) ; 김영한, 『분단과 통일에 대한 신학적 접근』, 『분단 상황과 한국교회』(서울: 한국로고스연구원, 1989) pp. 30~38.

2) 『브리태니커 대백과사전』, p. 432.

3) 『민중 옛센스 국어사전』, p. 2616

적인 태도와 주로 결부시켜 규정되었고, 동양문화권에서는 미움을 품지 않은 마음의 편안함이라는 내향적, 비정치적인 태도로 이해한 것으로 분석된다.¹⁾ 한편 서구 역사상 '평화'라는 말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용례로 사용되어 왔다.

첫째, 고대 회랍세계에서는 '에이레네(Eirene)'로 지칭되는 평화 개념을 사용하였다. 회랍인들은 '에이레네(Eirene)'를 끊임없이 지속되는 전쟁의 상황 속에서 잠시 전쟁이 멈춘 상태에서 경험하는 일종의 내적인 평온과 평안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규정되었다. 고대 회랍세계에서는 평화를 필연적인 영원한 전쟁의 와중에서 전쟁이 일시 중단된 '중간기' 상태에서의 개개인의 '마음의 조화로운 상태'를 의미한 것이다.

둘째, 로마제국에서는 '팍스(Pax)'라는 이름의 평화를 사용하였다. 로마인들은 '팍스(Pax)'를 전쟁에 대한 반대개념으로 규정하였다. 전쟁을 막기 위한 패권적 지배체제를 세우고, 이를 정치적 구조와 이념적 프로그램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평화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평화(지배체제)의 주체가 로마제국임을 밝힐 때는 '로마의 평화(Pax Romana)'로,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강조할 때는 '아우구스투스 평화(Pax Augusta)'로 불렀다. 결국 팍스의 평화는 군사력을 동원한 무력적 평정상태의 평화를 뜻하였다.²⁾ 팍스의 평화관은 '영국주도의 평화'(Pax Britannica) · '미국주도의 평화'(Pax Americana) · '소련주도의 평화'(Pax Sovietica) · '핵에 의한 평화'(Pax Atomica) 등으로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³⁾

셋째, 성경에서는 '샬롬(Shalom)'의 평화관을 언급하고 있다.⁴⁾ 샬롬의

1) '원색 세계대백과사전 30', (서울: 한국교육문화사, 1994) pp. 255~256.

2) '그대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는 Pax적 평화의 특징을 상징해주는 대표적 격언 중 하나이다.

3)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11. (The Macmillan Company and the Free Press: New York, 1972), pp. 487~496.

4) 신약이 말하고 있는 평화는 에이레네(Eirene)인데, 이는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쓰인 데 기인한다. 신약의 에이레네는 그 뜻에 있어 구약의 샬롬과 동일한 것이며, 고대회랍의 에이레네와는 철자만 다를 뿐이다.

단어적 의미는 “완전함, 건전함, 온전함”을 뜻하며¹⁾, 정의(justice)와 공의(righteousness)가 존재하는 동시에 폭력이 없는(nonviolence) 상황을 의미한다.²⁾ 성경에서 살롬은 하나님의 속성과 동일시되고 있으며³⁾, 평화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속에 있는 것으로 규정된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명령을 지키고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중의 하나로 언급된다⁴⁾ 구약에서 살롬은 건강과 선한 삶을 의미하는 개인적 평화⁵⁾와 가정과 국가의 번성과 안전을 의미하는 공동체적 평화⁶⁾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나타나는 종교적 평화⁷⁾로 사용되었다. 또한 신약에서는 전쟁이나 투쟁·혼란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회복의 결과로서, 마음의 평화 또는 평정상태로서 사용되었다. 따라서 번영과 잘사는 것만으로 평화라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곳에는 공의와 평화가 함께 하며(시 85:10, 사 32:17), 공의가 없는 번영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완전한 평화는 메시아적 구원에서 기대된다.(사 9:6,7)⁸⁾ 살롬은 구약에서 약속되었다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래한 구원의 총괄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 요컨대 살롬의 핵심적 구성요소는 ① 주체의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② 수단적 차원에서 비폭력 사용, ③ 목적적 차원에서 공의 추구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 1) 살롬이란 어떠한 부분도 결여되거나 부족하거나 손상되지 않고, 모든 부분들이 완전한 조화와 질서, 통일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 살롬의 반대말은 단순히 전쟁이나 분쟁만이 아니다. 그 반대말은 완전함의 파괴요, 조화와 화합의 붕괴이며, 불순종과 악함이다.
- 2) Duane K.Friesen, *Christian Peacemaking & International Conflict*, (Pennsylvania:Herald Press,1986), pp. 20~24.
- 3)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한 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살롬 (여호와와 평화이다)으로 명명하였다.(삿6:24)
- 4) 사 48:18 ; 사 57:2
- 5) 사38:17, 잠3:2, 삿19:20, 창15:15 등
- 6) 경제적 번영(대상4:40, 22:9; 시37:11, 147:14; 슥8:12), 정치적 안정(왕하20:19; 사32:18) 군사적 승리(삿8:9; 삼하19:24; 대상22:18)와 전쟁없는 상태(삿21:13; 삼상16:4-5; 시120:7; 전 3:8)
- 7) 공의(정치,총성: 시72:7; 말2:6; 삼하20:19), 언약(겔37:26; 렬:16:5) 축복(시29:11, 시55:12, 시128:6) 구원(시52:7; 시119:165)
- 8) 『기독교문장 대백과사전』(서울: 성서연구사, 1995), pp. 923~928.

결국 살림은 전쟁의 일시적 중단상태에서의 마음의 평화를 의미하는 희랍적 에이레네나 힘에 의한 평화를 지칭하는 로마적 파스와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¹⁾ 살림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과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하고 화평한 삶을 이루는 상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살림은 하나님과의 평화이며, 건강과 복지와 안녕을 누리는 완숙한 삶, 공동체 속에서 억압이 없는 자유와 공의를 누리는 조화된 삶, 자연 세계에 대한 조화로운 관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파스가 패권적 지배질서에 기초한 평화라면, 살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공의로운 삶의 방식에 기초한 평화로 규정할 수 있다. 결국 파스의 평화관은 무력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와 정의와 공존의 삶으로 공동체를 이끄는 데 있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 방식은 개인의 심리적 평화를 중시하는 에이레네 모델이나 힘에 의한 평화에 근거한 파스 모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에 토대를 둔 살림 모델에 기초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말해 하나님 중심주의적 관점에 분명하게 기초를 두고 남북한 상호인정과 협력의 사고를 갖고 통일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나. 한국 교회의 통일운동²⁾

한국 교회의 통일운동에 대한 평가는 관점에 따라서 국가발전과 민족화해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며, 분단체제를 고착화시켜온 것으로 혹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먼저 긍정적 측면을 반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교회의 통일운동은 비록 시대적 정치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았

- 1)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기독교 평화운동은 크게 3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평화지상주의(Pacifism), 의로운 전쟁론(Just War), 성전론(Crusade)이 그것이다. 박종화, 「기독교 평화운동의 이론과 실천유형,」 앞의 책, pp. 26~43.
- 2) 조동진, 「통일운동 50년사와 민족교회,」 「민족통일과 한국기독교,」(서울: IVP, 1994) pp. 32~72 ; 박종구, 「한국교회의 대북활동 분석과 제언」(민족통일에스라운동협의회 1997년 4월 월례발표회의 논문); 허문영, 「기독교 통일운동」 「민족통일과 한국기독교,」 pp. 131~139. ;

음에도 불구하고, 평화통일 지향적 방향으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교회는 북한을 처음에는 타도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점차 평화적 경쟁 상대로, 그리고 최근에는 함께 통일을 이루어갈 대화 상대로 보기 시작하였다. 또한 통일논리에 있어서도 초기에는 이데올로기 수호차원에서 대결적 논리를 전개하였으나, 이후 민족복리 증진차원에서의 평화 공존적 논리를 거쳐 합의, 평화 통일적 논리로 점진적 발전을 이뤄 온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한국교회의 통일운동 중 1980년대 진보교단의 연합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기독교)의 활동은 통일문제의 선교적 과제화와 민간부문에서의 통일 논의의 활성화 그리고 정부의 통일정책방향 설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예컨대 민족분단 고착화에 한국교회가 책임이 있음을 고백함과 더불어 민족통일 문제를 교회의 중요한 선교과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였고, 동시에 선지자적 감각에 기초해서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들도 제시하였다.

셋째, 1990년대 들어와서는 복음주의진영의 교회들도 북방선교 차원에서 평화통일문제에 대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기도운동을 통해 하나님과 민족 앞에 회개를 촉구하고, 북한주민을 정복의 대상이 아닌 구원의 대상으로 인식케 하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 동포의 식량난에 직면해서는 신앙적,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대북 식량지원 운동을 전개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동시에, 정부의 대북 강성 기조에도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부정적 측면도 있다. 첫째, 한국교회의 통일운동은 냉전의 시대적 상황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 왔다. 따라서 성경적 원리와 하나님의 공의 및 사랑에 근거하여 평화통일 운동을 추진하였다기보다는, 세속적 정부의 논리를 따라가거나 또는 이를 뒷받침하는 상황 추종적 통일 운동을 전개해 온 약점도 있다.

둘째, 일치와 절제가 없이 과열된 북한선교는 평화통일과 북한선교에 오

히려 방해적 요소가 될 수도 있었다. 탈법, 불법, 미확인 등의 대북 접근방법은 남북 상호간의 신뢰구축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교회의 재건을 위한 효율적 방법에 기초한 접근보다 북방선교에 대한 기득권 유지 또는 입지 강화 그리고 국내에서의 교세 확장을 위한 선전자료 확보차원에서 활용하려는 의도도 왕왕 보여 주었던 것이다.

셋째, 일방적 시혜의 물량 공세적 대북 원조 또한 평화통일과 북한선교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평화통일과 북한선교에 대한 신학확립과 교회간의 합의가 없이 무분별한 접촉과 사업추진 등은 선심공세가 빚는 부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방적 대북 원조에는 시혜자의 자만심을 촉발시킬 수 있으며, 남북한의 만남을 비정상적 관계로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평화통일에 대한 한국교회의 공과(功過)에 기초하여 향후 운동방향을 간략히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교회는 평화통일 운동과정에서 성경적 원리에 철저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한편 순결한 신앙양심으로 북한 교회재건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 그리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 성경적, 현실적, 창의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 확장의 관점에서 유혹과 고난을 무릅쓰고 평화통일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2. 북한의 평화관 및 평화통일안

가. 평화관

북한은 계급적 관점에 기초해서 평화를 2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이른바 '제국주의 국가'들의 억압에 의해 이뤄지는 노예적 굴종의 '부르조아 평화'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제국주의 국가'를 지구상에서

영원히 축출한 후 이룩할 수 있는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것이다.¹⁾ 또한 북한은 '진정한 평화'는 협상과 같이 구걸하는 방법이 아니라 제국주의자들과의 투쟁에 의해서 이룩되는 것이며²⁾, '미 제국주의'와의 투쟁³⁾이 그 기본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러한 평화관에 기초하여 북한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이 지속하는 한(제국주의가 남아 있는 조건하에서) 한반도의 평화는 노예적 굴종의 사이비 평화이며, 진정한 평화는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의 평화'는 주한미군 철수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통일수단으로 평화적 방도와 비평화적 방도의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⁴⁾ 평화적 방도란 남한 내에서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한 다음, 남한의 혁명정권을 흡수하거나 또는 남한의 현 체제가 연공정권 또는 용공정권으로 교체된 후, 이 정권과 합작통일을 실현하는 방법을

- 1) "노예적 굴종이 가져다 주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평화의 파괴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노예의 평화를 반대하여 억압자들의 통치를 뒤집어엎지 않고서는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없다." 김일성, 『김일성 저작선집 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p. 521. "부르조아평화주의의 반동적 본질은 제국주의의 존재 자체가 전쟁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은폐하면서 제국주의를 때려 부시지 않아도 지구상에서 영원한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설교하는데 있다."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1163.
- 2) "침략과 전쟁은 제국주의의 본성이다. 제국주의자들에게 구걸하는 방법으로써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 우리의 주체적 혁명력량을 강화하여 침략자들을 단매에 소멸할 수 있을 때 평화의 유지와 그 공고성은 담보된다. 평화를 전취하기 위해서는 또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건철한 반제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김일성 "우리의 혁명과 인민군대의 과업에 관하여," p. 31.
- 3)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도 반미투쟁은 평화를 위한 투쟁의 기본이다. 미제국주의는 평화의 주된 교란자이며, 평화의 가장 흉악한 원수이다.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세계평화를 수호할 수 없으며, 민족적 해방과 독립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승리도 이룩할 수 없다." 『김일성 저작선집 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5), p. 415.
- 4) 『김일성 저작선집 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pp. 91-93. 북한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이란 ①남한 당국이 인민들의 압력에 못 이겨 「조국통일 3대원칙과 5대강령」을 접수·실현할 경우 ② 남한에 반제·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거나 중립화될 경우 ③ 「남조선혁명」이 승리할 경우 가능함을 주장하였다. 한편 비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은 ① 미국이 복침하여 전쟁을 일으킨 경우 ② 미국의 세력이 약화된 경우 ③ 남한의 혁명정세가 고요하고 남한 인민이 북한의 지원을 요구할 경우 가능함을 주장하였다.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이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p. 264~271.

말한다. 이러한 평화적 방도를 적용한 전술이 바로 연방제 통일론이다. 그리고 비평화적 방도란 전쟁의 방법으로 남한을 공산화하고 통일을 달성하는 것으로 무력통일론을 의미한다. 무력통일론은 가장 완전하고 가장 빠른 통일방법이므로 북한으로서는 가장 원하는 방법일 수 있다. 단지 월등한 대남 군사력 우위와 외국간섭의 배제 (특히 미국)라는 두 가지 조건이 쉽게 갖추어 지지 않아서 그 동안 주저해왔던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북한이 분단 이후 줄곧 주장해 온 주한미군 철수는 바로 비평화적 방도의 통일을 지향하는, 즉 무력통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나. 평화통일안

북한의 평화통일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통일정책 결정요인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통일정책은 '사회구성체론'¹⁾에 기초한 '전조선혁명론'과 '3대혁명역량강화노선'²⁾ 그리고 북한 지도부의 정세인식³⁾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분석된다.⁴⁾ 북한은 사회구성체론⁵⁾에 기초하여 남한 사회의 성격을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 있는 농업 중심의 사회 즉 '식민지 반봉건사회'로 규정하고, 통일논리로서 「민족해방

1) 사회구성체란 맑스주의자들의 사적 유물론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경제적 토대와 그것에 의해 규정된 상부구조의 총체로 이루어진 하나의 특수한 사회적 유기체'를 의미한다. 맑스주의자들은 사회의 역사적 발전을 원시공산제사회에서부터 사회주의사회에 이르기까지 5개의 사회구성체로 구분하며,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북한은 남한사회를 '식민지 반봉건사회'로 규정하고, 혁명의 방향으로서 반제 반봉건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강조하였다. 조웅범·박현채 감수, 『경제화사전』, (서울: 풀빛, 1988), pp. 44-45.

2) 「3대혁명역량강화노선」은 「조국통일」을 위해 북조선 혁명기지를 강화하고, 남조선 혁명역량을 또한 강화하며, 나아가 국제 혁명역량과의 단결강화를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을 강조하는 북한의 통일이론 중 하나이다. 『김일성저작선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p. 94; p.239

3) 허문영, 『북한지도부의 정세인식 변화와 정책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4) 허문영, 『북한의 통일정책』 『북한외교정책』, (서울: 서울프레스, 1995), pp 131-172

5) 북한은 '사회구성체'라는 개념보다 '사회경제구성태'(역사발전의 일정한 단계에 있어서의 사회경제제도와 그에 상응하는 상부구조의 총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정치사전』, pp.527-528.

투쟁론'과 「인민민주주의혁명론」을 제시하였다. 다시말해 북한은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식민지 통치'를 민족분단의 원인으로 강조하고, 통일을 분단된 민족의 재통합이 아니라 '미제' 때문에 성취하지 못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완성하는 것으로 주장한다. 따라서 북한은 '미제를 타도하기 위한 민족해방투쟁'과 '반동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인민민주주의혁명'을 달성하면 남한에서 '인민정권'이 수립될 수 있으며, 이렇게 될 때 남북한의 '인민정권'이 '합작(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것으로 주장해 온 것이다.¹⁾

한편 '민족해방투쟁'과 '인민민주주의혁명'에 기초한 '합작(평화)통일'이라는 기본틀 하에 북한은 3대혁명역량의 객관적 편성상황과 이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주관적 인식과 의지에 따라 그동안 다양한 '평화통일안' 또는 '평화공세'를 전개해 왔다. 그것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²⁾ 첫째, 남북한 총선거안이다. 총선을 통한 남북통일안은 가장 오래된 북한의 평화통일안이다.³⁾북한은 총선을 제안할 때마다 한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제조건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거부를 유도하여, 통일을 반대하는 것이 한국임을 선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총선거안은 1960년 연방제안이

- 1) 이런 맥락에서 제 1단계 '민족해방'을 위해서는 대미 평화협정 체결 → 주한미군 철수 → 한·미 상호방위조약 폐기의 순서를, 제 2단계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위해서는 60년대 '통혁명' 같은 전위당 구축과 통일전선체 형성 → 남조선혁명 → '인민정권' 출범의 순서를, 제 3단계 '조국통일'을 위해서는 남북 「정치협상회의」개최를 통한 연방제 통일의 순서로 발전 시킬 것을 강조해 왔다.
- 2) 북한은 대남 정책 수단에 있어서는 무력·혁명·대화·(위장)평화 등의 방식을 상황에 따라 배합·사용하였다. 북한은 남한을 강제 점령하려는 무력해방, 연방제 합작통일을 추진하는 남조선혁명, 물리적 또는 혁명에 의한 통일이 불가능할 경우 공산화역량을 키우기 위한 남북대화 및 위장평화 공세 등을 융통성 있게 선택하였다. 예컨대 북한은 1950년대 초반과 1960년대 후반같이 3대혁명역량이 강화되었을 때는 무력해방전략을 과감히 추진하였고, 1950년대 중반과 1990년대 같이 3대혁명역량이 약화되었을 때는 위장평화와 공존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이외의 상황에서는 대체로 선전차원의 위장평화공세(남북대화 제의 및 연방제 통일방안 제시)와 전복차원의 통일전선전술(무력도발 및 지하당 구축)을 병행·추진하는 이중전략을 구사하였다.
- 3) 북한은 「남북한체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1차 1948.4.30, 2차 48.7.5)에서 총선을 통일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발표된 이후 크게 강조되고 있지 않다.

둘째, 원조 및 남북교류안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동시에 남한 주민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수단으로 식량, 전기, 철강 등 경제원조를 제공하겠다는 평화공세를 1956년부터 1962년까지 전개하였다.¹⁾ 그리고 남북교류제안은 경제적 우위를 자신하던 195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북한의 평화공세중 하나이다.²⁾ 물론 북한은 경제적으로 열세임을 깨닫게 된 1970년대부터는 이에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와 경제회생 없이는 체제유지가 불가능함을 깨닫게 되어, 북한은 다시 경제를 중심으로 한 남북교류에 적극적 태도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셋째, 연방제안이다. 북한은 남한에서 1960년 4.19가 일어나자 총선을 위한 과도적 조치로서 연방제안을 제시하였다. 연방제안은 이전의 어떤 제안보다 설득력 있게 보이는 도전적 제안이었다. 북한은 이 제안을 통해 '한국의 현 체제를 인정한다'는 양보를 보임으로써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남한 국민의 반공주의 약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불안정한 남한 정세를 활용하여 흡수통일을 모색하였던 것이다. 연방제안은 이후 1970년대 「고려연방제안」, 198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으로 이름을 달리하며 오늘날까지 북한의 통일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넷째, 대민족회의안이다. 북한은 정권 초기부터 정당사회단체대표들이 모이는 회의를 열자고 주장해 왔으며, 1970년대 남북회담이 중단되자 그 대안으로서 「대민족회의」를 제의하였다.³⁾ 북한은 민족통일의 주체가 인민이므로 당국자 대화만으로는 부족하니, 전민족적 범위에서 인민을 대표할

1) 내각결정 제43호(1957.5.7.), 내각결정 제60호(1959.9.23.) 등
 2)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8차회의 호소문」(1954.10.30) 등
 3) 1950.6.7.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협의회」 제의; 1973.4.16. 「남북정치협상회의」; 1973.6.23. 「대민족회의」; 1982.2.10. 「남북정치인 100인 연합회의」; 1988.1.1. 「남북연석회의」; 1989.1.1. 「남북정치협상회의」; 1989.9.28 「민족통일협상회의」; 1990.1.1. 「남북당국·각정당수뇌협상회의」; 1990.7.3. 「민족통일협상회의」; 1991.1.1.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 1994.4 「민족대회」; 1995.1.24 「대민족회의」; 1996.1.30 「남·북·해의 정당·단체 연대회의」 등

수 있도록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군인, 민족자본가, 소자산계급과 같은 각계 각층의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민족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견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북한의 의도는 남한정부를 일개 단체로 격하시키고 남한의 여러 단체와의 통일전선체를 구축하여 통일을 이루려는 것이다. 대민족회의 안은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안」, 「북, 남, 해외 정당, 단체들의 연대회의」(1997년) 등의 모습으로 지속, 제의되고 있다.

다섯째, 군축 및 평화협정안이다. 북한의 평화통일안 중 가장 선전효과와 설득력이 높은 방안은 상호 감군, 상호군축, 평화협정 체결과 같은 것들이다. 상호감군안은 1954년 6월 제네바회의에서 당시 북한외상인 남일이 제안한 때, 1957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일성이 제시한 '10만 감군안'으로 정형화되었다. 한편 평화협정안은 1955년 8.15 경축사에서 김일성이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제의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북한은 1962년 10월 최고인민회의 제3기 1차회의에서 김일성 연설을 통해 '북남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하였고, 1974년 3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3차회의에서 「미합중국 국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북남평화협정' 체결을 철회하고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가 체결되자, 북한은 남북간에 불가침 및 화해, 협력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후 1994년 4월 북한은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북측 관계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키면서 정전기구를 대체할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대미협상을 제기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북미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¹⁾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당사자에서 남한을 배제하고 있는 데, 위와 같은 이유뿐만 아니라 남한은 정전협정의 서명당사자가 아니고 미국

1) 북한은 1991년 3월 유엔사(UNC)측 군사정전위 수석대표에 한국군 장성(황원택 소장)이 임명된 후 군정위 본 회의를 중단한 이래, 중감위 체코대표부 철수(93.4), 군정위 북한대표단 철수(94.4),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설치(94.5), 군정위 중국대표단 철수(94.12), 중감위 폴란드대표단 철수(95.2), 판문점 중감위 건물 폐쇄조치 발표(95.5) 등 현 정전협정체계 외해를 지속하고 있다.

128 평화통일: 어떻게 이룩할 것인가?

의 「괴뢰국」으로서 자율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

한편 최근 북한은 평화통일을 위해 전쟁위험 제거를 주장하고 있는 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도로서 ①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포기 ②조미 평화협정 체결 ③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 ④남북불가침 합의 재확인 및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 또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절박한 요구임을 선전하는 한편,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①남한의 '반북 대결정책을 연북 화해정책'으로 바꿀 것 ② 남한의 군사정책(무력증강 및 무기반입, 외국군대와의 합동연습, 군사도발 행위)을 바꿀 것 ③남한 사회의 민주화(국가보안법 철폐,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보장)실시를 반복하고 있다.²⁾

북한은 이 같은 통일관을 분단이후 지금까지 지속해 오고 있는 데,³⁾ 살림적 평화통일관에서 볼 때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비평화성이다. 북한은 남한 정부를 타도해야 할 '미제의 괴뢰정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평화란 무의한 것이다. 북한이 평화통일방도의 전제조건으로 남조선혁명을 강조하고 있는 데, 남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결코 평화적 방법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비민족성이다. 물론 북한은 통일문제를 '외세에게 빼앗겼던 민족적 자주권을 되찾는 문제'이자 남북이 함께 해결해야 할 '민족내부문제'로 줄곧 강조해 왔다. 그러나 실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는 데 있어서는 회의가 있다. 남한에도 잘못이 있지만, 북한은 김일성 주석 사망이후 줄곧 남한배제적 대미접근전략을 추진하였고, 주변4국의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 경쟁 촉발시킴으로써 민족의 운명을 국제사회에 내던지는 양상을 보여주

1) 허문영, 「북한의 대미국정책 변화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2) 김정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로동신문」, 1997.8.20.

3) 북한은 최근에 발표된 김정일 논문을 통해 「조국통일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그리고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조국통일 3대원장」으로 강조하고, 이를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강령적 지침으로 거듭 강조하고 있다. 김정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1997.8.4.' 「로동신문」, 1997.8.20.

고 있기 때문이다.¹⁾

3. 남한의 평화관 및 평화통일안

가. 평화관

남한은 평화를 전쟁 또는 전복의 반대 개념으로 정의하고, 헌법에서 평화통일을 통일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²⁾ 평화통일이 남한헌법의 이념으로 규정되고 있음은 평화통일의 실현이 남한의 국가적, 국민적 과제로 제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남한 정부는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을 통해 상호 적대감과 불신을 해소하는 한편, 가공적인 국가체제의 조립보다 더불어 살아가는 '민족공동체 형성'에 주력하는 공동체통일 방안³⁾을 수립하여 평화통일을 추진해 왔다.⁴⁾

한편 북한이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을 「조국통일 3대원칙」으로 강조하고 있듯이, 남한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통해 통일의 기본원칙으로 '자주·평화·민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남북한은 이들 용어에

1) '남조선 당국과 대화를 갖는다는 것은 시간낭비이며, 그러한 대화를 통해 해결될 것이라 아무것도 없다.' 「로동신문」, 1997.8.9 ; 허문영, "최근 북한의 대외정책 동향과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6) pp. 3-15.

2) 헌법은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前文)할 것과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제 4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제 66조 3항)고 규정함으로써 평화통일을 위한 대통령의 의무도 제시하고 있다. 「1987년 대한민국 헌법」 참조

3) 공동체통일 방안'은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1982)으로 시작되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89)을 거쳐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1992) 등의 남북관계 개선을 고려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94.8.15)으로 발전적으로 제시되었다.

4) 장명봉, "통일교육법의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 검토" (민족통일연구원 세미나, 1997.7.25)

대한 정의를 제각각 내리고 있다.¹⁾ 여기서 '평화'의 의미와 관련하여 남한은 통일이 전쟁이나 상대방을 전복하려는 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아무리 통일이 민족지상의 과제로 절실한 염원이라 할지라도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민족의 희생을 강요하는 무력이나 폭력의 방법을 결코 사용해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²⁾ 즉 통일은 무력의 사용이나 폭력적인 수단을 배제하고 대화와 교류를 통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³⁾ 그러나 북한은 남한의 현 정권을 타도하고, 용공정권을 수립하여 북한정권과 합작하는 (전쟁을 통하지 않는) 통일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주한미군과 남한정부의 축출을 위해 사용되는 폭력은 북한의 평화관에 따르면 평화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⁴⁾ 남한은 바로 이같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경험에 기초하여 평

-
- 1) '자주'의 개념과 관련, 남한은 통일이 어떤 외부세력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민족자결의 정신에 따라 남북 당사자간의 상호협의를 통해 우리 민족 스스로의 뜻과 힘으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의미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자주는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지배를 끝장내고, 남조선에서 미제가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1990.8)'라는 김일성의 주장처럼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 안보동맹체제의 와해를 의미한다. 또한 '민주'의 개념과 관련, 남한은 통일을 이룩하는 절차와 방법이 민주적 원칙에 입각하여야 함은 물론 통일조국이 민주국가여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북한은 '민족대단결'을 강조하면서 '연공·연복 및 반정부세력과의 단결'을 지향하는 통일전선사업 수행을 의미하며, '민족대단결은 공산주의자와의 연합을 전제로 하며, 이를 위해 정치적 법률적 장애를 제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통일원, 『통일문제이해』, (서울: 통일원, 1996), p. 103.; 강승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조국통일사상과 그 빛나는 구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3), pp. 39-51.; 허중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이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p. 10-11.
 - 2) 『통일백서』 (서울: 통일원, 1996), p. 81.
 - 3) 이동복, "남북기본합의서 무엇이 문제인가?" p. 15
 - 4) 평화통일은 남조선에서 파쇼통치제도의 청산과 원수들을 반대하는 계급투쟁을 동반한다" 허중호, 앞의 책, pp. 205-210.

화의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 그리고 평화의 문제를 신뢰의 문제와 연결시켜, 1992년에 발표된 「남북기본합의서」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조항을 삽입하였다.²⁾ 그러나 남한은 평화를 통일의 방법, 과정, 목적 중 방법과 관련하여 주로 강조하는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나. 평화통일안

지난 50여년 동안 남한이 추진해 온 통일정책의 특징은 북한 실체와 분단 현실에 대한 인식이 점차 현실화함으로써 평화통일 지향성이 크게 제고된 점을 들 수 있다.³⁾

첫째 북한관과 관련하여 볼 때, 1960년대까지 남한은 북한을 소련의 세제적화 노선에 의해 탄생된 불법적 괴뢰체제로 간주하고, 실질회복의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와 남한은 북한을 비록 독립적 주권국가로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정치적 실체로는 인정하였다. 이같은 관점은 남북대화과 교류, 협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평화통일구상 선언」(1970.8.15)에서 비롯되었다.⁴⁾ 1980년대 이후부터는 북한을 경쟁과 대결, 그리고 적대하는 대상으로서 뿐만 아니라 신뢰, 화해,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민족공동체의 일원 또는 동반자로

1) 남한은 1950년 한국전쟁을 북한의 남침에 의해 발발된 것이며, 따라서 전쟁 당사자도 북한과 미국이 아니라 남·북한이고 평화의 당사자도 남·북한인 것임을 강조한다. 또한 1953년 휴전이후에도 남·북한간에 폭력사태가 끊임 없이 없었음도 강조한다. 1968년 1·21사태를 시작으로 1970년대 비무장지대 남침땅굴 굴착행위와 1983년 미얀마 아웅산묘소 테러사건과 1987년 대한항공 858 여객기 폭파사건 그리고 1996년의 잠수함 침투사건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2) 기본합의서 12조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훈련의 사전통보와 통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군인사의 상호교류와 정보의 교환, 검증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신뢰구축조치의 시행을 통해 필요한 정도의 투명성(Transparency)을 확보한 뒤 이를 토대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포함한 단계적 군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선 신뢰, 후 군축」의 수순을 거부하고, 「선 군축, 후 신뢰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3) 「통일백서 1995」, pp. 54~62.

4) 이후 남북한은 분단 26년만에 공식대화를 갖고, 1972년에는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통일원칙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는 「7·4 남북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인식들은 1988년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과 1989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9.11)에 반영되었으며, 드디어는 북한을 대화석상으로 이끌어내 1992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에 합의하게 하였던 것이다.

둘째 통일개념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때, 1960년대까지만 해도 남한은 통일을 주로 실지회복(대한민국 통치권의 북한지역으로의 확장)을 지향하는 국토통일로서 생각하였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는 통일을 남북의 두 정치체제가 하나로 되어야 완전한 통일이 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통일을 지향하는 체제통일로서 간주하였다. 그러나 남북대화가 진행되면서 남북한은 가치관과 행동양식 그리고 생활습속 등에서 심각한 이질화 현상을 노정시켰고, 그 결과 내면적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통일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통일이 되는 것임을 인식케 되었다. 따라서 남한의 통일정책은 남북한의 체제공존을 통해 민족통일을 거쳐 체제통일과 국토통일로 나가는 점진, 단계적 통일접근으로 전환케 되었다. 이러한 남한 정부의 통일정책은 1989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제의되었고, 1994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보완, 발전되었다.

셋째, 통일방식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평화통일에 대한 남한의 의지도 또한 더욱 공고화되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혹자는 제 1공화국 정부가 한 때 무력통일을 추구한 것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 1공화국 정부는 무력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 준비도 하지 않았다. 단지 구호만 있었던 것이다. 한편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는 1960년대 이후 고도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더욱 확고해 졌고, 제 4공화국 정부 하에서는 '선 평화, 후 통일'의 접근방식으로 구체화되었다. 그 결과 신 국가와 정부수립을 위한 평화적 통일방식으로서 '자유총선거'를 강조하게 되었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북한만'의 자유총선거에서 '남북한' 자유총선거로의 변화와 선거의 기본규범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남북한 통일헌법'으로의 발전적 변화가 나타났다. 현재 남한정부는 1994년 8월 15일 제49주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를 통해 기존의 통일방안을 보완, 발전시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평화통일방안으로 지속하고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을 민족공동체 건설로 이해하고, 통일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주」를 통일과정으로 「화해, 협력단계」→「남북연합단계」→「통일국가 완성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넷째, 통일문제가 정권적 차원에서 이용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정책 기조는 3가지 선언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되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박정희 정부는 1973년 6월 23일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6.23선언)¹⁾을 통해 평화공존의 정신을 천명하였다. 이 선언은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을 위한 기존의 여러 제안들을 종합, 체계화한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1974.8.15)²⁾으로 발전되어 종전의 '선 건설, 후 통일'에서 '선 평화, 후 통일'로 정책을 전환케 하고, 이후 평화통일을 공식적 통일방식으로 정착케 하였다. 또한 노태우 정부는 1988년 7.7선언과 1989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통해 북한을 '선의의 동반자'로 간주하고, 민족공동체로서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³⁾ 그리고 문민 김영삼 정부는 1996년 8.15.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주변 국가의 영향력 확대경쟁과 북한의 경제난 심화와 불안정성 증대 상황에 직면하여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협력'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민족 주체적 통일 준비와 더불어 평화통일의 기조를 강화한 것으

1)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모든 노력 경주 ②한반도의 평화유지, 남북한간의 내정불간섭 및 불침략 ③성실과 인내로써 남북대화 계속 ④북한의 국제기구 참여 불반대 ⑤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불반대 ⑥평화선린에 기초한 대외정책의 추진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이해」(서울: 통일교육원, 1997), p. 89.

2) ①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상호 불가침협정 체결 ②상호 문화 개방과 신뢰 회복, 남북대화과 다각적 교류·협력 진행 ③ 공정 선거관리와 감시하 토착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총선거 통일 「통일백서」(서울: 통일원, 1995), pp. 70~71.

3) 통일원, 「통일문제이해」, pp. 92~96.

로 평가된다.¹⁾

그러나 살롱적 평화통일관에서 살펴볼 때, 남한의 통일정책에도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 첫째,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북한을 이끌수 있다는 공작적 발상이다. 수년전 대북정책을 놓고 우리 사회에서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북한을 밀어부치면 붕괴를 유도할 수 있다는 '바람론'과 북한을 따뜻하게 대해 주면 북한의 정책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햇볕론'이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필자의 소견으로는 둘 다 공통적으로 범하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다름아닌 $y = ax + b$ 의 일차방정식적 발상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북한은 우리가 밀어부친다고 해서 무너질 수 있는 체제도 아니고, 우리가 따뜻하게 대해준다고 해서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체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른바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한다'는 발상은 이제 포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둘째, 합의통일을 표방하면서 일방적 관점을 고수하는 자세이다. 시장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기저로 하는 남한과 '우리식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북한이 합의하에 하나로 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각자의 관점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는 한, 평화와 통일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가 명확해 져야 한다. 이러한 전략적 자세를 갖고 있어야 소탐대실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4. 평화적 통일을 위한 제언

그동안 남북한은 1992년 9월 제 8차 고위급회담까지 「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등 12개 문건을 채택, 발효하고, 총12개의 협의기구를 구성하

1) 김영삼 정부는 1997년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4가지 방향(①무력포기 ②상호존중 ③신뢰구축 ④상호협력)과 남북협력에 관한 4가지 방향(①식량난 해결협력②남북대화 ③국제사회 진출지원 ④북한의 자세변화)를 제시하였다. 김영삼, "광복 52주년 기념 대통령 경축사" "북한" 1997년 9월호 pp. 197~200.

여 남북화해, 협력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현 남북한관계는 경색국면에 처해 있어 화해, 협력단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 1993년 3월 12일 NPT탈퇴를 선언하고,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해 핵문제 및 한반도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려함으로써 남북 당국간의 실질적 대화는 중단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북한은 김일성 사후 대남 비방을 다시 강화하는 한편, 1994년 11월 8일 한국 정부의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에 대하여도 조평통 대변인을 통해 비난, 거부하고, 1996년 9월에는 잠수함침투사건을 도발하였다. 게다가 1997년에는 주체사상의 대부였던 황장엽 비서의 탈북(1월)과 중등외교 총책이었던 장승길 대사 형제일가의 망명(8월)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태에까지 내려가 있다. 북한은 남한을 배제한 채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해 체제보장 및 한반도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김영삼 정부하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차기 문민정부가 출범하는 1998년 상반기에 김정일 정권도 공식출범하게 될 경우, 남북관계는 북한의 필요에 의해 제한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¹⁾

그러나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은 그냥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최악이 관영한 사회에서 평화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분단이 고착화되고 적대의식이 만연된 한반도에서 평화통일이 아무 노력 없이 이루어 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평화통일을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방향과 내용은 무엇이 될 것인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남북한의 정부는 자기 주도하의 정치적 차원에서 평화통일에 주안점을 두고 모든 평화통일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

1) 북한은 김정일 명의로 최근 발표된 논문을 통해 사회주의국가들과의 연대성 강화보다 자본주의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상징하는 주체성 강화를, 적화통일을 보다 강조하는 계급성보다는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의미하는 민족성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김정일 정권의 대외정책으로서 대미·일관계 및 대남관계를 체제수호적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 1997.6.19" 『로동신문』 1997.6.21.

나 평화통일은 단순히 정치적 차원에서의 접근에 의해서만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평화통일은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북한 정부의 전향적이고도 사려깊은 정책과 더불어 남북한 주민의 의지와 능력이 국내외적 여건을 극복해 나갈 때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평화통일을 위해 우리가 추진해야 할 일을 먼저 기본방향부터 다시 생각해 보고, 이에 기초하여 정부와 교회가 추구해야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내용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그것은 주변 4국의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북한의 남한 배제 전략 또한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한에게는 자주적,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 가야 할 책임과 그 기반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통일정책의 기본방향을 간략히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¹⁾

첫째, 목표를 재설정하자.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에 기초하여 북한체제의 조기 붕괴와 한국의 흡수통일을 막연히 기대할 것이 아니라, 김정일 정권 및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주변 4국의 대한반도 개입 정도에 대한 올바른 평가에 기초하여 21세기 '한민족' 생존, 발전전략 차원에서 정책 목표를 제시하여야한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하고 가능한 목표가 '통일'보다 '평화' 즉 '분단의 평화적 관리'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방안을 재정립하자.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일방안은 결국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 대해 봉쇄 정책을 구사함으로써 체제붕괴를 유도하고, 그 결과로서 한국주도의 흡수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을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포함시키는 포용정책을 구사함으로써 체제발전을 유도하고, 그 결과로서 남북한간의 합의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제 2의 독일형 통일보다는 '한국형 통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창의적 노력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 허문영, 「남북한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대화 추진방향」 (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발표논문, 1995.11) pp. 18-24.

셋째, 정책을 재수립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이 주체가 되는 민족문제이자, 주변 4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제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국제적 비중을 가급적 감소시키고, 민족적 비중을 보다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자세를 재확립하여야 한다. 냉전시대에 한국전쟁을 경험하고, 이후에도 대북 군사력 열세와 대내 정치적 불안정에 처해 있던 남한은 북한의 대남정책과 통일문제에 대해 수세적, 수동적 태도를 취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북한의 의도 분석에 연연하던 구태의 상황의존적 접근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통일국가를 평화스럽게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인가를 염두에 둔 목표지향적 접근자세를 확립해야 한다. 능동적이고 공세적인 대북 자세가 필요하다.

다섯째, 관계를 재형성하여야 한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관계는 아직도 적대적 공존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북한 관계가 진정한 화해, 협력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호간 상대방에 대한 불신(적화통일과 흡수통일)을 해소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당국간 대화 및 경험의 흡수통일과 연계되어 있지 않음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노력이다. 예컨대 북한 당국이 '김일성 이후 시대(Post-Kim Era)'의 정책방향을 공식적으로 천명할 때까지 기다려줌으로써 신뢰관계를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분단과정에 상당한 책임을 갖고 있는 주변 4국들과의 관계도 '평화'의 원칙하에 친선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 정부가 해야 할 일

1) 실질적 평화통일정책 지속

첫째, '선 평화, 후 통일' 정책기조를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 북한

은 1990년 10월 동, 서독이 통일된 이후 1992년 소련의 해체와 1994년 김일성 사망 그리고 경제난과 식량난의 지속화로 인해 체제불안정화 요인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¹⁾ 그리고 이와 더불어 국제적인 핵사찰 압력, 한국의 성공적인 민주화 정착과 지속적 경제발전으로 인해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²⁾ 이에 북한은 정권안정과 체제유지 차원에서 대중, 러 관계뿐만 아니라 자본 제국주의 국가인 미국, 일본과의 관계개선에도 적극 나서는 전방위외교에 나서기 시작하였다.³⁾ 그 결과 한반도에는 지금 대단히 불안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북한의 체제불안정화 요인심화와 더불어 주변 4국의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한반도에 급변사태가 발생하게 될 경우, 북한의 도발 가능성 증대와 더불어 외세개입 기반의 강화를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통일문제 해결과정에 있어 외세의 일방적 개입여지를 최대한 축소시키면서, 우리 민족 내부간의 합의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공간을 넓힐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의 통일외교 기조인 3대 선언과 평화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부응하는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남한 정부는 그 동안 발표했던 선언에 실제 정책을 일치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어려워지게 되며, 국제적으로도 주변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통일정책 방향은 한반도문제의 국제적 비중을 낮추는 한편, 주변 4국 및 북한과 평화적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외정책 차원에서는 동북아 질서의 안정화 노력 속에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해결 원

1) 허문영,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과 지속성」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논문, 1996.12.13)

2) 허문영, 「북한지도부의 정세인식 변화와 정책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12)

3) 허문영, 「북한의 대외관계 현황과 전망」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11); 허문영, 「전환기의 북한외교정책」 『통일연구논총』 제2권 2호 (민족통일연구원, 1993)

칙'과 '평화의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북한의 자주적 체제발전에 대한 협력 원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국내적으로는 환상적인 조기통일 기대감을 불식시키는 한편 '함께 사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대북 정책 기조에 있어 우리는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를 또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목표는 단기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이며, 중, 장기적으로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임을 민족주체적 노력에 의해 이루는 데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당국의 '자율적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임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대북 유화, 포용정책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대북 유화, 포용정책 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적대적 태도를 지속할 경우, 대결정책의 추진이 가능함을 천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1980년대 미소 군비경쟁처럼 대북 군비경쟁을 전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2) 평화 지향적 공동안보정책 추구

첫째, 현재 북한은 군사동맹조약에 기초한 북방삼각관계의 해체에 따라 체제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북한을 현재 논의중인 아태 안보협력기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북한체제에 대한 남한의 보장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남북 평화공존체제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냉전체제의 해체 흐름에 부응하는 새로운 대북 안보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는 1970년대에 군사력 증시의 자주국방을 강조하였고, 1980년대에는 국민통합에 기초한 총력안보를 강조하면서 대북 적대적 '절대안보'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적정 군사력을 유지하되 전향적으로 북한과 협조하는 가운데 상호간의 공존을 모색하는 '상대적 공동안보' 개념에 근거한 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 우리에게 있어 안보는 이중적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이데올로기 지향적이며 대남 배제

전략을 구사하는 북한과 더불어 화해,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 가야할 민족사적 요청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주변 4국의 군사력 증강과 기술패권주의를 극복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남북 기본합의서」 내용대로 신의와 성실에 근거한 '대북 공동안보' 정책을 먼저 제안, 실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그러나 우리의 평화 지향적 의지와 달리 북한이 군사력 제일주의에 입각한 군비증강을 지속할 경우, 우리로서도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양적 대응보다 질적 대응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북한이 한국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협상할 의사가 없을 경우, 우리로서는 체제안보를 위해서 대북 군비경쟁과 체제경쟁 그리고 한미 안보동맹관계 강화를 전개할 수밖에 없음을 천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 평화체제 형성에 호응할 경우 한국은 정전체제의 준수 속에서 군비통제를 이룬 후,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좀더 전향적인 대북 정책으로서 평화협정을 남북간에 먼저 체결한 후, 군비통제와 협력 그리고 평화통일을 지향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3) 협력 지향적 경제정책 추진

첫째, 남북한 경험에 대한 새로운 방향으로서 포용과 자발적 체제발전의 협력정책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컨대 단기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 확보차원에서 북한 주민의 기본적 생필품(basic human needs)에 대해 협력하는 방향으로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통일한국 경제의 활성화 조성차원에서 북한 경제가 남한 경제와 상호 보완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 바, 요소 보완관계 뿐만 아니라 산업간 보완관계의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의 대내개혁 없는 제한적 대외경제개방 또는 체제수호적 대외개방이 우리 눈에는 다소 미흡하게 보일지라도, 남북한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을 위해 북한의 현실과 의도를 잘 파악하고, 북한의 작은 변화를 소중히 여기

며,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이 현재 곤란을 겪고 있는 4대난(식량난, 에너지난, 생필품난, 외화난)을 해소하며 민족경제를 육성할 수 있는 남북경협정책¹⁾을 전개한다. 1988년 이후 전개된 남북경협²⁾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물자교역의 경우 교역 총액은 1991년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주었고, 교역 방식은 반입 중심, 간접교역 위주, 대기업 주도, 위탁가공 활성화의 특징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협력사업의 경우 큰 진전이 없었다. 그리고 대북 지원의 경우 정부주도하에 북한의 에너지난과 식량난 해소를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었고, 생필품난 및 외화난 해결을 위한 사업들도 제시되었다. 한편 남북간의 정치적 관계, 북한의 내부사정, 남한의 국민합의 불일치와 정책적 일관성 부족, 제도적 장치 미비 등이 남북경협 활성화에 대한 일반적 장애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이 한반도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해 선택해야 할 남북경협 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남북경협의 목표는 민족경제 발전과 민족복지 향상이 되어야 한다. 구체적 세부목표로서는 남북한 지역경제의 보완적 발전, 남북한 지역경제의 경제력 격차 해소, 남북한 경제체제의 이질성 극복, 남북한 지역경제의 개방적 경제로의 발전 지향,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 등이 될 것이다.

넷째, 이와 같은 남북경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북한의 자주적 체제발전에 대한 협력' 노선이 공고화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 경협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북한을 하나의 '주체'로 인정하고, 북한의 현실과 정책방향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1) 남북경협은 남북한간 물품의 반입·반출을 의미하는 경제교류와 각종 투자 행위를 의미하는 경제협력력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남북경협은 간접 또는 직접교역, 위탁가공 무역, 다자간 협력, 제3국에서의 남북한 공동개발, 남북한간 공동개발 등 5가지 방식에 의해 추진될 수 있다. 이 가운데 현 단계에서 북한의 경제난 해결 및 체제안정화 욕구를 충족시키며 민족공동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식은 입가공 무역과 다자간 협력이 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직접교역과 남북한간 공동개발이 주요 경험방식이 될 것이다. 허문영,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남북 경험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일방적 지원 또는 시혜의 태도가 아니라 상호존중의 협력적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 경험정책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와 공기업 그리고 민간기업의 역할 분담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남북 경험정책을 통일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계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병행 추진하도록 하며, 한국은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시기에 따라 중점사업을 차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남북한 직접 경험이 어려울 경우, 다자간 협력 방안도 적극 모색하도록 한다.

나. 교회가 해야 할 일

우리는 통일문제를 논의할 때, 주로 정치적, 제도적 통일을 강조하나, 사실 사회적, 심리적 통일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전자는 남북한의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해야 할 일일 것이며, 후자는 남북한의 민간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해야 할 일일 것이다. 물론 전자에 대해서도 성경적, 신앙적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필요가 있으나, 기독교 개개인과 교회차원에서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역시 후자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독교인의 과제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

1) 튼튼한 영적 기초 정립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신학적·이념적 기초를 정립하자.(고후 10:5) 올바른 통일정책과 통일운동은 올바른 이념에 기초하는 것이고, 올바른 이념은 올바른 신학에 기초한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기독교 통일운동은 그 신학적 배경이 서로 달라 분열되고 있다. 남북통일 자체를 선교로 보려는 사회복음적 입장과 남북통일을 선교의 필수적 과정으로 보려는 보수, 복

1) 3중적 분단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교회의 역할과 관련하여서는 허문영, 「민족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실천과제: 사랑·공의·평화 운동을 제창하며」 「목회와 신학」, 1995년 7월호 참조, 예수님의 제사장적·선지자적·왕적 사역에 비추어 본 교회의 통일운동 방향과 관련하여서는 허문영, 「통일소고」 (기독교대학실립동역회 출판부, 1999) 참조

음적 입장의 차이는 결코 작은 것은 아니다.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에서는 평화통일을 위해 민중신학 및 여성신학의 관점에서 통일신학에 대한 많은 연구서와 논문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기총, 남북나눔운동 등 복음주의 진영 쪽에서도 이질화된 민족동질성의 회복, 분단된 한국민족의 재통합, 북한교회의 재건과 복구, 통일한국의 새로운 이념과 사회상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평화통일신학의 정립에 애를 쓰고 있다.²⁾ 민족의 지상과제인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신학의 차이와 신앙의 양태 차이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본질은 동일한 것인 만큼, 진보와 보수가 지혜를 같이 짜내어 한반도에서 새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2) 공생 지향적 정신적 자세 확립

첫째, 북한 동포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야 할 것이다.(마5:9) '국토상의 장벽은 허물어졌으나, 심정상의 장벽은 새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통일독일의 현황이다. 그리고 이러한 심정상의 장벽이 다시 허물어지기 위해서는 한 세대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되고 있다. 우리는 북한 동포들이 우리와 다른 체제에서 50년 이상을 생존해 왔음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한다. 우리와 다른 사고방식 및 생활양식을 갖고 있다고 하여 그들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격체임을 인정하고,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그러나 황금만능주의적 자본주의 생활에 익숙한 남한사람으로서는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결국 이 일은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전개해야 할 일이다.

둘째, 올바른 가치관을 회복하고 이를 교육해야 할 것이다. 남북통일 이

1) 유은상, 「남북대화 시대의 기독교계 통일운동 방향」 p. 79.

2) 그 대표적 저술로는 김영한, 「평화통일과 한국기독교」; 김명희, 「통일과 선교」; 김종석, 「교회는 통일을 대비하라」(서울: 반석문화사, 1993); 남북나눔연구위원회, 「민족통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서울: 두란노, 1994); 기독교학문연구회, 「민족통일과 한국기독교」(서울: IVP, 1994);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통일정책위원회, 「한국교회 통일정책」(서울: 나침반, 1997) 등이 있다.

전에 남남통일부터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내부에서의 계층간, 지역간의 화합과 협력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계층간의 화합을 위해서는 그 동안 우리가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물질만능주의와 극단적 이기주의에 의해 살아왔음을 겸허히 반성하고, 우리 사회가 진정한 민주복지공동체 사회가 되도록 서로 아끼고 감싸고 상부상조하는 노력을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가정경제를 주관하는 여성은 과소비를 지양하고, 가진 자는 덜 가진 자를 의식하며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간의 화합을 위해서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인재의 균형 있는 인사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며, 교회적 차원에서는 '지역' 보다 '복음'이 우선하는 것임을 거듭 강조, 교육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적대문화를 무너뜨리고 평화문화를 만들어 가자. 평화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한 동포들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주님께서는 고통받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마25:35-36) 주님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 25:40)라고 말씀하였다. 주님은 또한 원수까지도 굶주릴 경우에는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 그러나 성경의 이상적 측면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또 다른 적대문화를 내부에서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평화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평화인물을 키우자. 주님께서는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마5:9)고 말씀하셨다. 몇 년전 독일통일과정에서 서독인 입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마지막 정부 외무성 기획실장을 지낸 한 교수를 만난 적

이 있다.” 그는 독일통일이 우연히 이뤄진 것이 아니며, 2+4가 아니라 1+4 방식에 의해 통일이 이뤄졌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자유백림대 교수이자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분단시대에 동독의 인권신장과 교회부흥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동독인 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신뢰로 인해 비록 서독인 입에도 불구하고 동독이 무너질 때, 동독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통일협상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이미 동, 서독 정부는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미, 소, 영, 불 4강과 협상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평화통일을 진정 원한다면, 우리도 북한동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평화인물들을 양성해 나가자. 그래서 평화를 사랑하는 자(peace-lover), 평화를 꿈꾸는 자(peace-dreamer), 평화를 만드는 자(peace-maker), 평화를 지키는 자(peace-keeper)가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인물을 키우자.

3) 공의로운 물질적 기반 확립

첫째, 근검, 절약을 생활화하자. 북한은 모든 것이 너무 없어서 생존의 곤란을 느끼는 실정인데 반하여, 남한은 모든 것이 너무 많아서 생활의 곤란을 느끼는 실정이다. ‘쓰레기를 줄입시다’를 표어로 내세운 어느 신문의 캠페인도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낭비하지 말 것과 우리 이웃의 가난한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통일 비용’의 막대함을 이야기하며 통일의 어려움과 심지어 불가능론을 언급하고 있으나, 우리가 지금부터 보다 근검, 절약을 생활의 원칙으로 삼으면 통일비용은 보다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나눔을 생활화하자. 통일이라는 거창한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는 지금 여기서 비록 작지만 큰 여정의 기초가 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소외되어 있는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그리고 지체부자유인들과 최근에 몰밀 듯 들어 온 중국 교포들과

1) 울리히 알브레히트(Ulrich Albrecht), "독일의 통일성취와 유럽평화구조의 발전과정," 『평화연구』 제2호, (서울: 고려대 평화연구소, 1992), pp. 121~144.

동남아시아 출신의 노동자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서 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구쏘련 중앙아시아 및 사할린에 흩어져 있는 '까레스키' 동포들, 중국 동북 3성에 흩어져 있는 '조선족' 동포들 그리고 베트남의 한인 2세대들인 '라이한'에 대한 지원과 보호도 계속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할 수만 있다면 북한 동포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필요와 물질적 궁핍의 해소를 위해 사랑의 쌀 보내기 운동과 사랑의 분유 나누기 운동 및 약품 보내기 운동을 추진하여 합법적으로 은밀하게 보내는 것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여기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그날에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는 자기 기만이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어리라” ❀